



KOTRA 워싱턴 D.C.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2회(화/목) 배포합니다.



📌 주요 내용

🎯 워싱턴 D.C. 포커스

- (무역정책) 美 상·하원, USTR 무역정책 청문회 개최 1
- USTR 대표는 상호주의 관세와 무역적자 해소 전략을 옹호하며, 다수 국가와의 개별 협상 진전을 강조

📊 경제통상 동향

- (관세)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90일 유예, 對中 관세 인상 발표 4
- (조선업) 백악관, '미국 해양 지배력 회복' 행정명령 발표...동맹국과 협력 강조 5
- (관세) 트럼프 대통령, 의약품 관세부와 공약에 비용 부담 놓고 논쟁 예고 6

⚖️ 의회법안 동향

- 외국 수입품 오염 수수료 부과, 중국 투자 견제, 대통령 관세 권한 제한 등 입법 3건 7

💬 이시각 헤드라인

-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8
-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9

📅 워싱턴 D.C. 주요일정

4.11(금)	• 3월 PPI 생산물가지수 (Producer price index)
4.15(화)	• 3월 수입 가격지수(Import price index)
4.16(수)	• 3월 미 소매 판매(U.S. retail sales)
4.17(목)	• 4월 둘째 주 초기 실업수당 청구(Initial jobless claims)

(무역정책) 美 상·하원, USTR 무역정책 청문회 개최

1. 개 요

□ 미 상원 금융위원회(4.8) 및 하원 세입위원회(4.9)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을 점검하기 위한 연례 청문회를 각각 개최

- 양 청문회에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
- 관세 부과 원칙, 동맹국 대상 조치, 미-중 무역 관계, 리쇼어링, 협상 전략 및 무역적자 해소 방안 등을 두고 격론이 오감

2. 청문회 주요 내용

① 무차별적 관세 정책과 상호주의 원칙 강조

- 그리어 대표는 “관세에는 예외가 없다”며, 특정 로비나 정치적 고려 없이 모든 국가에 동일 원칙 적용 방침을 강조
 - 동맹국이라 해도 미국 제품에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는 한 관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입장
- 기존 제재 대상국(러시아, 북한 등)에 대해서는 이미 고율 관세 및 제재가 적용 중임을 설명

② 무역적자 해소와 제조업 재건 목표

- “바이든 행정부가 남긴 1.2조 달러 무역적자는 ‘국가비상사태’ 수준이며, 제조업 붕괴와 직결된다”고 평가
-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인프라·환경 관련 규제 완화 필요성 제기

③ 개별 국가와 무역 협상 추진

- “일방적 관세만이 해답은 아니며, 상호주의 달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협상에 열려 있다”고 언급
- 50개국 이상이 협상 타진, 베트남·이스라엘·인도 등은 자국의 장벽 완화 의지 전달
 - 일본, 베트남과는 포괄적 무역 협상 중이며, 각국 상황에 맞춘 맞춤형 협상 필요성 언급

④ 對中 조선산업 관행 조사 및 후속 조치

- USTR은 중국의 조선·물류 산업 관행에 대한 301조 조사를 바탕으로 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 부과 등 다양한 조치를 제안 중
- 농업계를 비롯한 국내 산업계의 반발이 큰 가운데, 그리어 대표는 “모든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며 “4월 중순 경 최종 결정 예정”이라 설명

⑤ 상호관세 관련 90일 유예 조치 및 협상 진전

- 그리어 대표는 “중국을 제외한 다수 국가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보복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90일 유예 기간이 마련되었다”고 설명
 - 유예 발표 직후 다수 국가들이 협상 요청을 해왔으며, 약 60개국 이상이 협상 의사를 밝혔다고 증언
- 스티븐 호스퍼드 하원의원(D-NV)은 상호관세 90일 유예 조치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이라며, “청문회 중에 처음 알았다”고 강하게 비판

⑥ 의약품 및 반도체 수입에 대한 관세 조사 예고

- 그리어 대표는 의약품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는 조사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관세 시행까지는 수 주에서 수개월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
-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를 통해 관세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향후 첨단기술 분야로의 관세 확대 가능성을 시사

3. 반응

□ 민주당 의원들은 관세 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전략 부재 및 국내 경제·외교 신뢰도에 미치는 부작용을 집중 비판

- “협상 목표와 로드맵이 없다”, “기존 FTA 파기와 무엇이 다른가”라는 회의적 시각 표출
- 중산층·농가 부담, 무역 협정 신뢰도 저하 및 의회 소외 문제 제기
- 마다가스카르, 베트남, 이스라엘 등 선의의 양보에도 고율 관세 부과된 점을 지적하며 정책 형평성 및 예측 가능성 부족을 우려

□ 공화당 의원들은 무역적자 해소와 상호주의 관세 원칙에는 대체로 공감했으나, 관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일부 현실적 우려도 제기

- “우리는 세계를 구했지만, 이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때”라며 강경 노선 지지
- 일부 의원은 관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리쇼어링과 제조업 복귀를 위해 규제 완화 병행 필요성 강조
- 척 그래스리 상원의원(R-IA)과 마리아 칸트웰 상원의원(D-WA)은 대통령이 부과하는 신규 관세에 대해 60일 내 의회 승인을 요구하고, 미승인 시 자동 종료되도록 하는 ‘Trade Review Act’를 공동 발의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정수나
■ 자료원	상원 금융위 청문회(4.8), 하원 세입위 청문회(4.9)

(관세)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90일 유예, 對中 관세 인상 발표

• (개요) 국가별 상호관세 90일 유예, 對중국 관세 인상 발표(4.9)

* 4.10일 현재 백악관은 대중국 관세는 펜타닐 관련 부과된 20%를 포함 총 145% 라고 발표

- 트럼프 대통령, 대중국 관세를 125%로 인상하고, 그 외 국가는 상호관세 90일 동안 유예 및 기본관세 10% 부과 즉시 발효 발표(Truth Social, 4.9일)

* 대중국 상호관세 34% 부과에 중국 정부는 미국 수입품 대상 84% 관세로 맞대응(4.9)하고 끝까지 싸울 것 언급하며, 미-중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발표

• (상세) 상호관세는 90일 동안 유예, 부분별 관세는 기존 관세율 유지

-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부과에 중국이 세계시장에 보여준 존중의 부족에 근거, 대중국 관세*를 125%로 인상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용납 불가 표명

- 또한, 보복 조치 없이 미국 정부와 직접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한 70여개 국가*포함 모든 상호관세 대상 국가에 90일 동안 기본관세 10% 즉시 적용

* 무역장벽, 관세 환율 조작, 비화폐적 관세 등 해결책 모색을 위해 75개국 이상 접촉 언급

- ① 철강·알루미늄(25%), 자동차(25%)와 같은 부분별 관세는 기존 관세율 유지, ② 캐나다 멕시코는 동 조치에서 제외, 기존 관세율(USMCA 미준수 상품 25%) 유지

- 베센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장벽을 낮출 의향이 있는 국가들과 “맞춤형” 무역협정을 원하고 있으며, “상호관세가 중국 측근 국가들이 미국과 협상을 모색하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대통령의 협상 전략임을 강조

- 동 조치 직후 미 주식 시장은 급등(나스닥 12.2%↑, S&P 500 9.5%↑)했으나, 현지 언론은 관세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및 미-중 무역전쟁으로 긴장 고조 중점 보도

▪ 작성자 | 워싱턴 D.C. 무역관 문현주

▪ 자료원 | 인사이드(4.10), 뉴욕타임스(4.10,4.10), 블룸버그(4.9)

(조선업) 백악관, ‘미국 해양 지배력 회복’ 행정명령 발표…동맹국과 협력 강조

• (개요)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해양 지배력 회복’ 행정명령 서명(4.9)

* RESTORING AMERICA'S MARITIME DOMIN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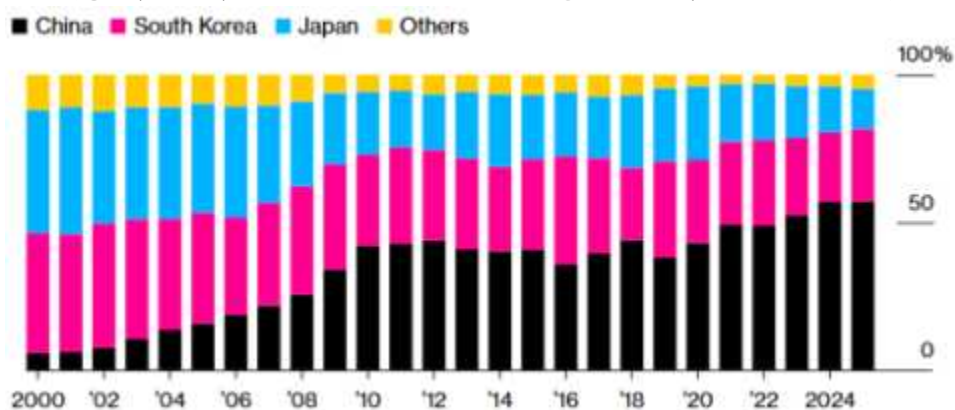
- 미국의 조선업 부활을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 협력해 무역 정책을 조정하고 미국 내 선박 건조와 해군 군사 활동 지원을 위한 상선 확보와 미국 투자 촉진 강조
-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전담 부서*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

* 해양산업역량국(Maritime and Industrial Capacity Directorate)

• (상세) 중국 견제 및 의존도 감소 전략 내포, 동맹국에 기회 및 도전요인 관측

-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부문에 대한 불공정 관행 조사 지시, 중국산 선박 및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 부과 검토 등 의존도 감소 전략 추진
- 국방부 및 국토안보부의 상선 선박 조달 과정을 점검하고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지시, 한편 상무부에는 90일 내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는 구체적 인센티브 방안 마련 지시
- 현재 이 분야에서 중국 이외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 확대 가능성 주목, 단, 동맹국에 미국 내 투자 요구는 일부 부담으로도 작용할 가능성 지적(블룸버그)

〈중국, 한국, 일본의 세계 선박 인도량 점유율(‘25년 2월 기준)〉



[자료: 클락슨스, 블룸버그 인용]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김준희
■ 자료원	백악관(4.9), 블룸버그(4.9)

(관세) 트럼프 대통령, 의약품 관세부와 공약에 비용 부담 놓고 논쟁 예고

• (개요) 트럼프 대통령, 제약 산업 대상 관세부와 조사 지시 예고

※ 232조 조사(Section 232 Investigation)로, 변경 사항이 발효되기까지 수개월 소요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 관세를 10%로 조정하고 90일간 유예하면서도 제약 산업 대상 관세부와 공약(4.8)
- 베센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90일 유예 조치가 의약품과 같은 특정 산업 부문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4.9)
- 이번 조치가 글로벌 제약 공급망 및 미국 의료 비용 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제기

• (상세) 관세부와 시, 제약사와 보험사 간 갈등 촉발과 가격 및 공급망 영향 우려

- 다수 의약품이 해외에서 원료를 생산한 후 미국 내에서 완제되는 공급 구조상, 관세 부과 시 제약사와 보험사 간 비용 부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분석
- 또한, 보험사가 비용 전가를 거부 할 경우 제약사가 이를 흡수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연구개발 축소 및 인력 감축 가능성도 언급
- 특히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중국·인도산 원료 의존도가 높아 관세부와 시 공급 불안 우려가 제기되며, 인도 기업은 미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피해 최소화를 추진 중
- 시장에서는 관세 조치가 △특정 제품 가격 인상 제한, △기업의 시장 철수 가능성, △의료비 상승 등 복합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김경현
■ 자료원	WP(4.10)

의회법안 동향

구분 (현행일)	법안 (발의일)	대표 발의자	법안 및 주요 내용
외국 오염 수수료 부과 (4.08)	S.1325 (상) (4.08)	Bill Cassidy (공)	〈외국 오염 수수료법 (Foreign Pollution Fee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염도에 따라 특정 수입 제품에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1986년 세법을 개정
중국 투자 견제 (4.08)	S.1360 (상) (4.08)	Rick Scott (공)	〈미국 자본 보호법 (Protecting American Capital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의 대중국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연례 보고서 제출 요구
대통령의 관세 권한 제한 (4.08)	H.R.2712 (하) (4.08)	Josh Gottheimer (민)	〈무역 심의법 The Trade Review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안보를 사유로 한 대통령의 관세율 수정 권한 제한 및 특정 관세/수입을 제한하는 무역대표부(USTR)의 권한 축소

* 미국 동부 시간 4월 10일 15시 모니터링 기준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The Wall Street Journal	Stock Selloff Accelerates as China Trade War Sinks In (심화되는 미중 통상전쟁...주식 매도세 가속화)
	백악관이 대중 관세를 125%에서 145%로 정정한 후, 9일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표 후 상승세를 보였던 증시는 다시 하락하고 급값은 트로이온스당 \$3,155.2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The Washington Post	The most surprising things Americans are panic buying amid tariff fears (관세 공포 속 미국인들의 사재기 품목은?)
	관세 정책으로 장바구니 물가 폭증을 우려한 미국인들은 1. 고양이 습식사료 2. 한국산 자외선 차단제 3. 워딩 드레스 4. 인스턴트 커피 5. 가발용 머리카락 6. 보드게임 7. 김 8. 향수 등 품목의 사재기(Panic buying)에 나서
The New York Times	For U.S. Apparel Manufacturers, Chaotic Tariff Policy Isn't Much Help (美 의류 제조업체, “혼돈의 관세 정책은 도움 안돼”)
	미국 의류 제조업체들은 구스다운, 원단 등을 각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단시간 내 미국에서 섬유를 재배할 수 없으므로 계속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업체들은 관세로 인해 의류 가격이 상승된다면 소비자 수요는 감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 중
CNN	Prices are rising. See how much the cost of basic grocery items has changed (지속되는 물가상승...식료품 가격은 얼마나 올랐을까?)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로 달걀 값이 상승한 가운데, 국가별 상호관세도 식료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돼. CNN에 따르면 달걀값은 전월 대비 6%, 베이컨은 3%, 체다치즈는 4% 상승해
USA Today	International travel is declining, and it's costing the US: 'It's shaking everything up' (국경정책 강화로 “미국 여행 안가요”)
	미국 신정부 출범 후 국경정책이 강화되며 외국인 여행자들은 미국 여행을 취소하고 있어. 9월말까지의 캐나다발 미국행 항공편은 70% 이상 급감하는 등 미국 관광 산업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 미국 동부 시간 4월 10일 16시 기준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5-11	2025년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 의제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5.04월
US25-10	美 USTR의 중국 조선업 무역법 301조 권고 조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5.04월
US25-09	2025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Report) 주요 내용	2025.04월
US25-08	‘미국 우선 투자 정책’ 대통령 각서 발표 및 주요 내용	2025.04월
US25-07	미일 정상회담, 안보 및 경제 협력을 통해 동맹 강화	2025.02월
US25-06	美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부과 조치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5.02월
US25-05	美 하원에 발의된 ‘미국 상호무역법안’ 상세 내용 및 시사점	2025.02월
US25-04	미 하원, 공정 무역 회복법(Restoring Trade Fairness Act) 발의	2025.02월
US25-03	‘디지털 금융 기술에서의 미 리더십 강화’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5.02월
US25-02	2025년 글로벌 경제·통상 정책 전환과 주요 일정	2025.02월
US25-01	美 신정부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대통령 조치 분석 및 시사점	2025.01월
US24-47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글로벌 무역 동향 보고서 주요 내용	2024.12월
US24-46	미 2050 원자력 3배 확대 로드맵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4.12월
US24-45	美 상무부 반도체 장비·고대역폭메모리 수출통제 조치 주요 내용	2024.12월
US24-44	트럼프 2기 정부의 전기차 정책 변화에 따른 업계 영향 전망	2024.12월
US24-43	현지 언론이 평가한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정책과 향후 전망	2024.12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인터뷰번호	제목	바로가기
코인시-21 (2025.2.8.)		
코인시-20 (2024.12.23.)		

문의	이메일	전화
	seogil.chang@kotra.or.kr	+1) 202-857-7919
	jwshim@kotra.or.kr	